

흔들리는 식량정책 멀어지는 식량안보

정부가 중국산 식용쌀을 수입했다. 작년에 인도산 가공용쌀을 수입하면서 내세웠던 '식용쌀수입불가'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이번 조치로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신문에서는 식용쌀수입에까지 이르는 정부의 정책변화와 현재 식량자급정도를 알아보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김 승 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연구원)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줄어드는 논면적

부족한 쌀생산으로 정부재고바닥 장기적인 정책으로 개방 대처해야

지난 8월21일 부산항에는 정부가 식용으로 수입하기로 한 중국산쌀 7만1천톤중 1만1천3백톤이 실린 삼선트러스트호가 입항했다. 이는 정부가 WTO(국제무역기구)협정에 따른 MMA(최소시장장점-최소수입물량)물량 44만톤중 일부를 식용으로 수입하겠다고 공표한 이래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지난 7일 공주에서는 한농민이 더이상 쌀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버가다 익어가는 논 6백평을 갈아엎기까지 했다.

쌀부족의 원인

이번에 수입되는 쌀 7만1천톤은 우리나라 연간소비량의 1.25%에 해당하는 양이다.

왜 정부는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용쌀을 도입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계속적인 쌀부족으로 내년도에는 정부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쌀산업중립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쌀생산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쌀부족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초 2백38만섬으로 예상되었던 쌀재고량은 실제 1백55만섬에 불과하며 이중 식용은 60만섬으로 우리국민의 6일치 식량밖에 안된다. 이는 FAO(국제식량농업기구)재고권고량이 대략 2달치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수치이다.

한때는 남아돌아 팔지를 쉬었던 쌀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농업이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다른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70년대이후

정부는 이중곡가제라는 가격정책아래 증산을 유도, 자급을 달성하였으나 물가안정의 논리아래 쌀가격이 오를만하면 정부미를 방출하여 가격을 낮추었다. 이는 저임금정책과 연결되었으며, 이후 쌀의 파잉재고와 보리스비의 급격한 감소로 일부 농수산물들의 선택적 포기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하에 시장지향주의, 경쟁력지향주의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쌀이외의 식량자급도는 현저히 떨어져 현재 30%를 밑도는 수준이며 쌀의 경우는 구조조정정책하에 수매량과 수매가의 축소로 가격지지를 받지 못해 생산량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생산량이 줄어든 직접적 원인은 쌀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통계치를 보면 91~95년 사이에 줄어든 논면적은 105,620ha로 이 면적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약 6백만섬 정도이며 작년 쌀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첫째, 무분별한 농지전용 때문이다. 정부가 타용도로의 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지법때문에 논에 러브호트,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둘째, 가격보장이 되지 않아 농민이 벼농사를 외면하고 있

기 때문이다. 쌀농사의 수익성은 타작물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농민들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논에다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논에 비닐하우스, 창고, 유리온실 등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방편에 불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쌀생산량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난 6월 쌀산업중립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현 추세대로라면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세도로 바꾸고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제도는 EU(유럽연합)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농가소득보전, 생산조정, 환경보전이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일종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직접지불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때문에 외국의 직접지불제도의 대부분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쌀중립화정책이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보다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쌀산업중립화정책에

는데 선도금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나 약정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수매제도 개편에 이어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내년도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실행한다고 한다. 3년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농가에 대해 인근 쌀전업농가에 5년이상 농지를 임대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지었을 때의 소득과 일종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접소득을 임대기간 동안 받을 수 있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기준한 3년분을 한번에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제도는 EU(유럽연합)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농가소득보전, 생산조정, 환경보전이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일종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직접지불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때문에 외국의 직접지불제도의 대부분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쌀중립화정책이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보다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후의 완전개방에 대처하고 주곡인 쌀산업의 전망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는 현시기를 쌀부족기로 규정하고 증산을 위해 농지면적의 확보, 단위(단보=3백평 당 수확량)의 증대, 생산비의 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 내용은 현재 전체 농지의 50%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강화하고 2004년까지 110만ha, 벼재배면적 92만ha를 유지하고 단수는 2004년도에 480Kg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방지 대책이 없는 지금 논면적 110만ha가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단수는 88년 10a당 481Kg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통일벼를 재배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90년부터 94년까지의 평균단수는 447Kg에 불과한데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평균단수를 43Kg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개발,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아울러 발표했지만 통일벼와 같은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다수성 품종은 환경

을 파괴하는 물론 이제는 소비자의 기호와도 맞지 않는다. 때문에 양질의 다수성품종개발이 요구되는 것인데 환경보전형 농업에 맞는 신품종개발이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단위증대에는 품종의 개발적 측면도 있지만 지력의 문제도 있는 만큼 품종의 개발로 단수를 증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 종합대책필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쌀산업중립화정책은 쌀산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식량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한시적인 방편이라고 해도 좋은만큼 그 구체성과 전망이 부재하다.

92년 대선때 김영삼대통령은 쌀만은 개방을 막겠노라 공약한 바 있고 전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MMA물량은 모두 가공용만으로 수입하겠다고 대국민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세계 쌀가격은 해마다 30%씩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는 한해만 흉작이 들어도 그 타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정부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후의 완전개방에 대처하고 주곡인 쌀산업의 전망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강단시론

박 중 국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각종 위기 사태들이 만연해 있다. 한국경제 위기가 그렇고 대학교육의 위기가 그렇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현대사 평가에 대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지만 양을까 걱정이고, 한총련 사태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에 더 높은 장벽이 쳐지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을 달성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통일논의를 활성화한다면 문명정부하에서 이러한 위기들이 정권의 성숙기에 발생했다는 것은 크나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명정권의 정치지도자들의 태생적 한계로 보나 영국의 글래스고우 칼레도니아대학 심리학자 리자 마살이 분석한 정치인들의 속성으로 보나, 이 역설은 실로 역설도 아닌 것이다.

경제의 위기, 대학의 위기

경제위기라는 것은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최근 외국의 경제전문잡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저성장, 수출증가율 감소, 경상수지 적자 급증 등을 1994년 멕시코 경제위기때의 지표와 면밀히 비교한 논문을 실었는데

있었던 것은 우수 인재를 잘 활용한 탓도 있지만, 기실은 기득권을 이용한 지대추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때문이다. 얼마전 정부는 재벌부문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최상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경제위기의 파도에 휩싸여 침몰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더 강한 구조로 거듭나야 할 터인데 오히려 위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결단 고치고 내용은 못고치는 잘못된 관행은 대학교육의 위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세계의 우수대학 1백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대학의 질을 개선해보려는 일로 시행된 최근의 교육개혁은 대학교육에 시장원리를 수평적으로 도입하였다. 인기가 없거나 실용성이 없거나, 졸업생들의 취직이 잘 안되는 전공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대학평가를 하고 학부제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대학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리 큰 실효를 못보고 있다. 논문 하나 찾기 위해 서울에 있는 여러 도서관을 돌고 돌아 복사하는데만 하루가

'위기론'의 위기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그리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태를 위기라고 부른다면, 문제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에 대한 경계심이 하늘을 찌를듯 했으나 2년여 지난 지금 여기저기서 부실공사현상이 고발되는 것을 보면, 이 경제위기론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도 못한 채 말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우리경제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한다면 그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문제이다. 재벌기업들이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가 작지 않고, 경제적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96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백69개이고(삼성(55), LG(48), 현대(46)의 순), 2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 11개나 더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공통처럼 크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만의 예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더우기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재벌부문의 비중이 과다하고 이러한 산업구조는 궁경없는 경쟁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마라톤 시험에 레슬링 선수를 세우고서 우승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유지될 수

결한다는 말을 들으면 미국 대학의 도서관 직원들이 웃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도서관만 해도 장서 수는 많다고 하나 막상 필요한 책은 없다. 전문학술지는 있으나 중간 중간 구독이 안되어 빠져있는 것 투성이다. 복사할 목록을 가져가봐야 만타작이니 아예 다른 도서관으로 가서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대학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니 대학평가를 백번하든 무엇이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답보다 문제를 알아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있다. 세계의 우수대학이 명성을 날리는 이유는 졸업생들의 취직이 잘되서가 아니다. 실력있는 교수진, 알찬 교육과 학생들의 학구열, 훌륭한 시설과 연구 분위기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 대학교육의 위기는 교육부나 대학당국 그리고 교수들이 대학 문제의 본질을 고치는 데 주력하지 않은데서 기인된다. 내용은 놔두고 포장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야 무한 경쟁시대에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답을 아는 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과 사랑의 동부그룹

젊은 날의 꿈은 캠퍼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실현해 가는 보다 큰 캠퍼스 - 동부화재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이끌어온 회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인재를 키우고 한발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캠퍼스 시절의 포부를 더욱 창조적이고 실재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 -
동부화재가 이루어가는 "창원기업"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선택해는 동부화재 -
이제, 동부화재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갑니다.

한국자동차보험의 새이름
동부화재